

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

2007. 2. 7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보고순서

추진배경

비전과 추진전략

부문별 정책과제

수도권 질적 발전

향후 추진계획



I

추진배경



국가안전보장위원회

2. 참여정부의 정책의지

-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
[02년 대선공약]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차등 부과 및 교육·보육분야의 획기적 재정지원 방안 검토
[06. 9.19/10.17]

-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법인세 차등화, 복지·보육 등 획기적 정책 검토
[06.11.2, 제3기 균형위 출범시]

-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확실한 2단계 지역균형정책 개발
[06.11.29, 누리사업성과보고회]



Ⅱ

비전과 추진전략



국방과학기술개발위원회

1. 정책비전

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

2단계
[민간부문]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

기업하기 좋은
투자환경 조성



살기 좋은
생활여건 조성

1단계
[공공부문]

다핵형 국토공간 형성

- 행정중심복합도시
- 혁신도시·기업도시
- 공공기관 지방이전

지역혁신 역량 강화

- 지역혁신체계[RIS] 구축
- 지역 R&D 역량 강화
- 지역전략산업 육성

2. 추진전략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-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: 조세, 인력, 부지 문제 해결
-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: 주거 · 교육 · 의료 등 기반 확충

지역거점 중심으로 집중 지원

- 지방 대도시, 산업단지 클러스터, 중소도시 등 지역발전 거점 활용
- 기업환경 · 생활여건 등 종합 패키지 지원

지역별 인센티브 차등화

- 지역발전 정도, 투자환경 등을 감안 3그룹으로 분류
 - 분류[안] : 발전지역, 성장지역, 정체지역
- 지역분류, 고용효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

3. 추진과제 : 2대 부문 14개 과제

정책
부문



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- 1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- 2 인력난 해소
- 3 산업용지 공급 확대
- 4 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
- 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- 6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
- 7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

정책
과제

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- 1 고품질 주택 공급
- 2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
- 3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-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- 5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 인프라 확충
- 6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
-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Ⅲ

부문별 정책과제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정책방향

- 지방 창업 · 이전 ·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인 세금 · 인력 · 부지문제 집중 해결

①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
- 지방 창업 · 이전, 기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 경감
[1안]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(10~30년) 병행
[2안] 감면 대상기업 확대 및 감면기간 대폭 연장
※ 정책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 경감방안을 최종 확정
- 지역발전 정도, 고용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
-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대폭 조정
[현행 : 대기업 15%, 중소기업 : 10%]
- 외국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감 혜택 부여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② 인력난 해소

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

- ※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 지급

- **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**

-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허용 : 현행 기준 + 20%
-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

●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

-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맞추어 계약형 학과 등 집중 지원

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

● 저가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

- 산업단지 공급 애로지역에 집중 지원
※ 필요 시 농업진흥지역 등도 적극 활용
- 혁신/기업도시에 초장기 임대산업단지 공급
[예] 평당 연간임대료 : 조성원가의 1% 미만, 임대기간 : 50년



- **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**

- 이전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부지 적기 공급 지원
- * 국무총리 소속의 「지방산업용지 애로타개위원회」(가칭)를 두어 토지이용 규제 일괄처리
-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인프라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■
■

■
■

■
■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정책방향

- 주거·교육·의료·복지부문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
- 배후 지역과 연계하여 거점도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①

고품질 주택 공급

-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 제도 도입
 - 거주기간, 청약예금 가입 등 자격요건 면제·완화
 -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허용 기간(현행 2년) 대폭 연장
-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
 - 지방이전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
- 지방이전 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
 -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②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

🍌 지방의 초중학교를 '지역복지 거점학교'로 운영

- 특기 · 적성교육 및 지역사회문화 · 복지 · 학습 거점으로 활용



지방 명문고교 육성

- 전국지역 대상 1군 1우수교 육성[136개교]

-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

· 학생선발, 교육과정 편성·운영, 교원인사 등 자율권 부여

●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품질 향상

- 프로그램 전문화 : 예체능, 과학, 기술 등 교사 아웃소싱 비율[3.3%] 확대

- 지방 초·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율[13%] 대폭 제고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③

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• 지방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

- 이공계열 : 국가 장학금 지방 지원비율 확대(35%→60%)
- 인문계열 : 지방대학에 이공계와 동일조건으로 학비 지원
- 현행 선발기준(내신성적 상위 20%, 수능성적 2등급) 완화



• 지방대학에 현대적 기숙사 지원

- 신세대 취향에 맞게 독립형 주거공간이 확보되는 기숙사 확충
- ※ 단체생활형 → 개인/가족형

0101010111010111011000

101010101010101010111010111011000101011101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● 지방대학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
- 상속재산 지방대학 기부시 상속세 감면
-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



● 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지원

- 지방대학 특화 발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기여
[예] 인사교류·공동연구 등 포괄적 협약(MOU)체결
비수도권 지자체의 비용 부담조건으로 분원 설치·운영 등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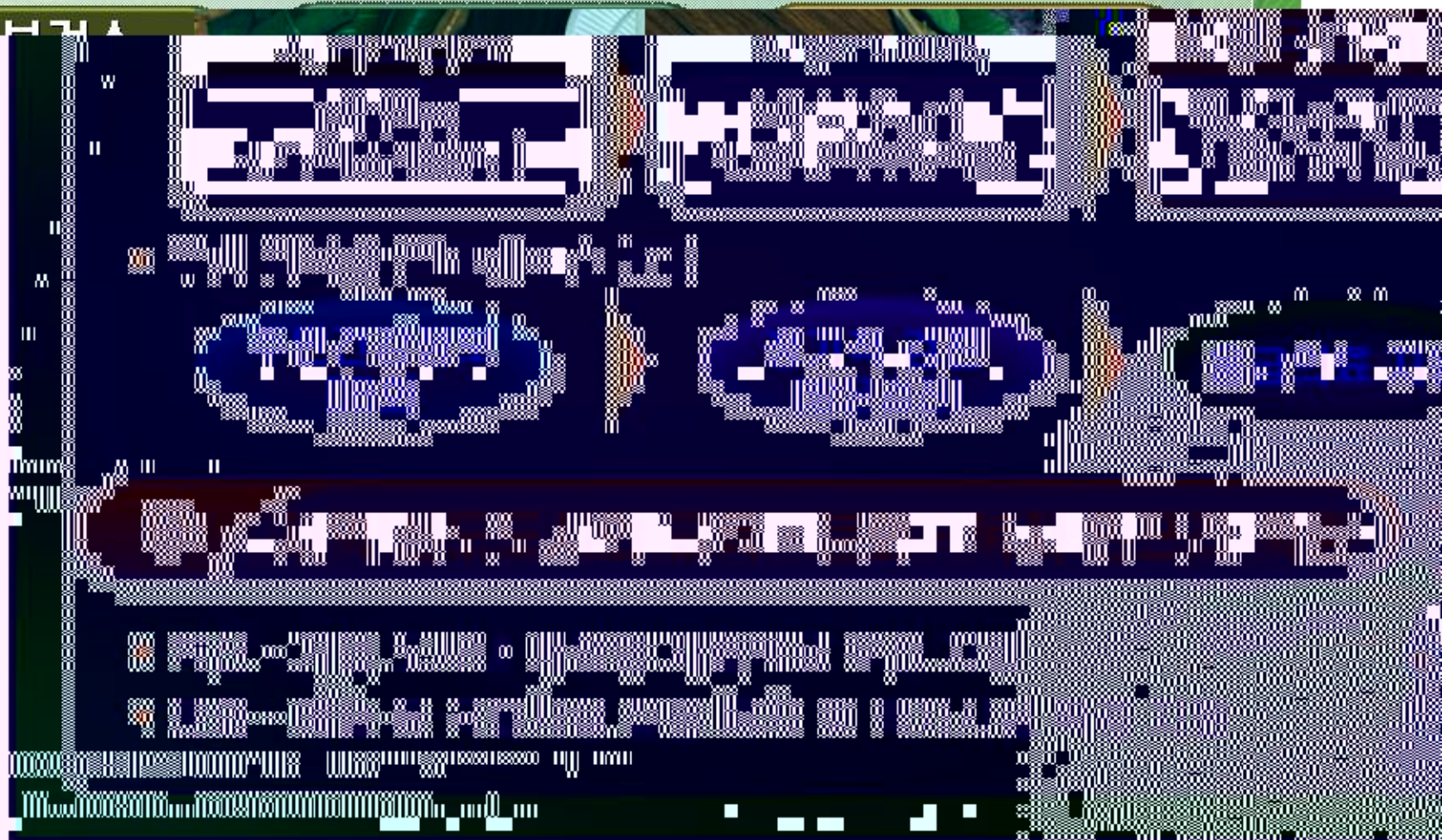


④

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
- 체계적인 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

지역보건사업



〈참고〉 재원소요



- 재정지출 소요 : 연간 1.2조원 내외
 - '07년 기존 예산규모 : 5천억원 수준
 - '08년에 5천억원 규모 증액 필요
- ※ 기금 · BTL 재원(2천억원) 별도



- 법인세는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구체적 경감 방안 및 규모 결정

IV

수도권 질적 발전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수도권 발전방향

● 수도권 질적 발전 및 경쟁력 강화

- 교육, 문화, 주거,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
- 지식클러스터, 국제교류, 금융기능 강화 및 SOC 확충



● 지방화 시책과 연계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

- 현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계획적 관리계획 수립중
 - ※ 국토연구원에서 '06.12월 기초연구 수행,
'07.12월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





V

향후 추진계획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과제구분

- [예]** · 인력난 해소
· 고품질 주택 공급
· 산업용지 공급 확대

- [예] ·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
· 대기업 지방 투자에 대한
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

조치계획

- **국민적 합의 후 법률 개정**
 - 정책 의제화하여 토론 및 합리적 대책개발 유도
 - 법률 제·개정

2.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

부문	과제명	조치유형			시행시기		차등화 방안	
		행정 조치	법령 개정	국민 참여	단기	중장기	2 그룹	3 그룹
기업 대책	①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		○	○		○		○
	② 인력난 해소	○			○			○
	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	○			○			○
	④ 경제자유구역·무역자유지역 추가 지정	○			○		○	
	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	○	○		○			○



감사합니다



국가군형발전위원회